

# 본지선정 '94

# 10대 양돈뉴스

-홍보부-

- ◇……어느덧 갑술년의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 ◇……UR협상의 타결로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타결로 강……◇
- ◇……화가 한층 더 강조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 ◇……또한 사회적으로 부정부패 및 사건/사고가 많았던……◇
- ◇……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미처 해결……◇
- ◇……하지 못했던 것도 말끔히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하……◇
- ◇……길 바라며 본지가 선정한 '94 10대 양돈뉴스를……◇
-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1

## 돼지고기 '97년 7월 완전개방 최종 확정

정부는 2월 14일 제네바에서 있는 UR협상 결과를 토대로 돼지고기를 '97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하고,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은 쿼터제에 의해 3~5%를 수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농산물 1,298개, 수산물 144개, 공산품 7,990개 등 모두 9,432개 품목에 대한 양허세율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UR협상 이행 계획서를 의결하고, 2월 15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이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통해 돼지고기를 '97년 7월 1일부터 전면개방하고, '95년에는 '92년도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지육기준 731,250톤)을 기준으로 3%인 21,930톤, '96년에는 4%인 29,240톤, '97년 1월부터 6월까지 5%인 18,275톤을 현행 관세 25%로 수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양허관세율은 '95년 37%, '96년 35.8%, '97년 상반기 34.6%, '97년 7월 1일부터 33.4%로 하고 이후 매년 1.2%씩 관세율을 낮춰가다가 2004년에 25%까지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95년 이후 쿼터량 이외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는 이 양허관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냉장돼지고기는 '95년에 29.6%의 양허관세를 부과한 후 매년 관세율을 낮춰가다 2004년부터 22.5%만 부과기로 했다.

2

## 사료 등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회 입법청원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사료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문제가 결국 국회에서 결말을 보게 되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본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는 11월 1일 국회농림수산위 김영진의원(민주)과 정창현의원(민자), 재무위 박태영의원(민주)의 소개로 "사료 및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동용회장이 청원자 대표로 서명한 입법청원서는 이날 오전 김영진의원과 정창현의원 이 국회 이종률사무총장을 방문, 직접 제출했다.

청원서는 "그동안 사료 및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문제는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

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해야 할 간접세인데도 사료생산자에게 부과되어 결국 축산농가에 전가되는 것은 조세체계상 모순"이라고 밝히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사료, 동물약품, 축산용 기자재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서는 "이 문제는 지난 12년간 각계각층에서 100여차례 이상 대정부 건의가 있었고,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물론 각 당 후보도 이를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출된 입법청원서는 11월 4일 소관 상임위인 재무위에 회부되어 현재 재무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3

## 사상 최악 폭염으로 돼지 피해 극심

7~8월 2개월간 지속된 '84년 이래의 최고 심각한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고온과 일사병으로 돼지가 폐사하고, 수태가 되지 않는 등 양돈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7월 22일까지 농림수산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폭염으로 전국에서 돼지 8,086두, 닭 857,000수, 소 212두, 기타 가축 81,000두 등 총 946,298두의 가축이 폐사했다. 도별로는 경남이 2,689두로 가장 많고, 전남 2,601두, 경북 1,341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폭염이 8월까지 지속된데다 가축폐사가 일어나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폐사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양돈농가들은 이같은 직접피해 외에도 종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태율이 크게 떨어지고, 사료섭취량 감소로 인한 성장률과 사료효율 저하, 산자수 감소, 위축돈 조산 발생 증가 등 간접피해도 매우 컸다. 이로인해 정부는 돼지고기 수입량을 늘리기도 했다.

이번 가뭄과 폭염은 '84년 이래 가장 심각한 것으로, 우리나라 상공에 매우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낮 기온이 32~39℃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특별양축자금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4

## 올 돼지고기 2만5천톤 수입

수입이 개방되기도 전인 금년도에 정부가 냉동돼지고기를 2만5천톤이나 수입해 양돈업계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금년도 돼지고기 부족량을 7천톤으로 책정했었으나, 돼지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안정상한가격 14만5천원을 넘어서자 물가안정을 빌미로 수입량을 대폭 늘렸다.

농림수산부는 3월 5일 1차로 돼지고기 5천톤을 긴급 수입키로 한데 이어, 8월 4일 추석물가안정용으로 3천톤을 추가 수입, 발주키로 결정했다. 농림수산부는 이후에도 연초 자돈설사로 인한 자돈폐사와 폭염으로 인한 성장저하로 수급물량이 달라져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수입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끝에 금년에 총 2만5천

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한 것이다. 금년도 수입량은 UR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수입할 쿼터량 21,930톤을 초과하는 양이다.

수입된 돼지고기는 주로 삼겹살과 목살, 갈비 등이며, 수입국은 덴마크, 대만, 영국, 아일랜드 등이었다.

이와관련 본회는 3월 8일 돼지고기 수입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설명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밀려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양돈농가들은 정부가 수입정책을 계속 펼칠 경우 양돈을 조기에 포기, 돼지고기 자급률이 급속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5

## 가축분뇨 자원화 본격 추진

가축분뇨를 단순히 폐수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유기질 비료 등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여론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학계와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축분뇨자원화 추진위원회(회장: 정영채)를 구성하는 한편,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가축분뇨자원화추진위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환경처와 농림수산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과 자금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8월 23일 축산농가(축

산부산물가축 분뇨)의 비료화 및 판매를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비료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와함께 금년에는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시켜 돼지사료로 활용하는 등 음식물 찌꺼기의 자원화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중앙개발(주)은 8월 29일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 하는 초고속 발효건조기를 본회에 기증하기도 했다.

환경처가 11월 14일 축산폐수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축사면적 1,400m<sup>2</sup> 이상에서 1,000m<sup>2</sup>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가운데 축산업계의 가축분뇨 자원화 움직임은 금년을 환경보전형 축산을 위한 원년으로 삼기에 좋을 듯하다.

## 6

## 돼지 유행성 설사 예방약 세계 최초 개발

돼지 유행성설사병(PED) 예방약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이재진)는 금년 10월 양돈농가에 큰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돼지 유행성설사병 예방약을 개발했다.

PED는 TGE와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70년대부터 유럽지역에서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말과 금년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자돈이 약 25%나 폐사하는 등 큰 피해를 경험하기로 했다. PED 감염에 의한 자돈 폐사로 금년도 돼지가격이 크게 올라갈 정도로 피해가 컸다.

이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예방약은 전세계적

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항생제에 의한 치료 역시 불가능해 위생관리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었다.

가축위생연구소는 농림수산부와 협력하여 긴급 가축방역비 3천만원을 투입, 10월 중순까지 야외적응시험을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한 후 10월 하순에 특허를 출원했다. 또 11월에는 국내 동물약품 제조업체에 예방약 생산기술을 전수시킨후 금년말부터 예방약을 본격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PED 예방약이 공급되면 전염성 설사병예방으로 인해 연간 4백23억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

## 대통령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 발족

김영삼대통령은 2월 1일 농어민단체, 학계, 연구계, 언론계, 재계, 여성계 인사 30명을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농어촌발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했다. 본회 전동용회장은 농민단체 대표로 농발위원에 위촉되었다.

농발위(위원장: 김범일)는 위원들을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균형개발 ▲농어민 복지증진 등 3개 소위로 나누어 활동을 벌인후 5월 24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농정개혁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대책”을 보고했다.

농발위는 최종 보고서에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비 절감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 등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수입사료곡물의 무세화

▲경영규모 확대와 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 자원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설치 ▲농어민 연금제 ▲의료보험통합 ▲양축가와 생산자 단체의 유통참여 ▲대도시 생축반입 및 도축금지와 도축장의 산지 이전에 필요한 토지 제공·현대화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6월 14일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축산신고면적 확대, 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농발위가 건의한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했으나, 양축농가의 염원인 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배제해 양축농가를 실망시켰다.

8

## 농정개혁 촉구 전국농민대회 개최

“우루과이라운드 재협상 쟁취·국회비준거부와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2월 1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서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과 학생, 시민 등 5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문민정부 이후 최대규모로 개최된 이날 대회는 본회와 낙농육우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9개 농민단체가 주최하고 범대위가 후원했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는 UR 재협상, 국회는 비준거부, 국민은 국민투표 수입개방 저지 ▲일방적인 수입개방 반대 ▲수입개방 강요하고 민족생존 위협하는 미국은 각성할 것 등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대회를 마친후 ▲축산물 수입개방 절대반대 ▲국회비준거부 ▲UR 재협상 쟁취 등의 구호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수백개의 피켓과 프랑카드를 앞세우고 대학로→종로5가→종로3가를 거쳐 탑골공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시위대중 일부는 미대사관쪽으로 진출하려다 경찰과 대치, 광교부근에서 전경버스 2대와 청소차 3대, 경찰순찰차를 불태우기도 했다.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농민, 학생 110명을 연행·조사하는 한편, 행사를 마친후 대회를 주최한 농민단체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날 대회는 문민정부후 최대 농민행사로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었다.

9

## 양돈업 등록기준 모돈 2백두로 상향 조정

농림수산부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축산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양돈업 등록기준을 현행 모돈 100두 이상에서 200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농림수산부는 6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이밖에도 종돈업 등록기준도 종돈 20두 이상에서 50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양돈업 허가대상 모돈두수는 500두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그동안 불필요하게 규제를 받던 전업규모 양돈농가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졌으며, 민원 발생도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본회는 양돈업 등록규모를 상향 조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했었다.

한편 농림수산부가 양돈업 등록규모 상향조정과 함께 추진하던 양돈업 허가규모 상한선 철폐 문제는 본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행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본회는 이와 관련 허가 상한선 폐지는 행정규제를 빌미로 재벌기업에 합법적인 부동산 투기의 길을 열어주고 중소기업 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대했었다.

10

## 정부 가변형 축사표준설계도 고시

정부는 1월 20일 축산물 무역자유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축산농가들이 손쉽게 축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3 가변형 축사표준설계도를 고시(건설부 공고 제1994-12호)했다.

이번에 고시된 가변형 축사표준설계도는 하나의 설계도면으로 여러 크기의 축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양축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설계도는 돈사의 경우 번식돈사(슬러리식), 비육돈사(슬러리식), 비육돈사(툽밥 발효식) 등 3종과 한우사 4종, 유우사 4종, 건조식 툽밥발효시설 1종 등 모두 12종으로 부지와 희망 사육두수 등 여러 가지 변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록 건축 기본단위별로 건물의 길이를 늘리고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번식돈사와 비육돈사 가변형 표준설계도는 모돈 30두~10두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설계했는데, 가변종류수가 번식돈사는 19종, 슬러리식 비육돈사는 22종, 툽밥발효식 비육돈사는 26종에 달한다.

정부가 고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 양축농가들은 설계도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설계비 부담이 없고, 공사감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시·읍·외 지역에서 축사를 건축할 경우 자가시공이 가능해 건축비가 크게 경감되고, 읍·면에 착공신고만 하면 건축이 가능하다.